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장악”...국제사회 거센 비판

‘두 국가 해법’ 기준과 완전히 다른 접근...강제이주 ‘인종청소’ 논란 하마스 “추방하겠다는 것” 반발...사우디·이집트 등 아랍국도 반대 팔레스타인·아랍국 맹렬 반응...“미국을 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것”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220만 팔레스타인인을 주변 아랍국에 영구적으로 재정착시킨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쫓아내면서 소수집단 자체를 계획적으로 말살하는 ‘인종청소’에 미국이 손을 보태는 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지구의 소유권을 갖겠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특히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주민 강제 이주에 반대해온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다 휴전에 합의한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기간 관리·개발하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재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것이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잠재력은 믿기 어려운 정도”라면서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아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부터 여러차례 가자 주민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과 관련한 발언을 해왔으나 ‘영구적 재정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주민 내보내고 가자 갖겠다”...인종청소-제국주의 논란 불거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이 떠난 가자지구의 소유권을 미국이 넘겨받아 개발을 진행하길 원한다면 ‘같은 사람들’이 땅을 재건하고 차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은 전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비공개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미국은 가자지구를 넘겨받을 것이고 그곳과 관련한 일도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가자)을 소유할 것이고 위험한 불발탄과 여타 무기를 모두 해제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어떻게 하마스를 제거하고 평화를 회복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무너진 건물 잔해 등을 치운 뒤 가자지구를 경제적으로 개발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제3국에 재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주민이 떠난 가자지구를 미국이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적 언급 역시 없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서 특정 집단을 정책적으로 몰아내는 행위는 ‘인종청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런 종류의 행위를 과거 독일 나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만행과 동급으로 보고 인류 최악의 범죄 ‘제노사이드’(genocide)까지 규정하고 있다.

일단 제3국 이주를 강행하고 가자지구에 미군을 주둔시킨 채 이권을 쥔다면 당장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미국을 ‘제국주의적 패권국’으로 보는 중동 내 반

미 진영과 일부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이번 사태로 반미감정이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해온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도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서방 강대국들이 지역 주민들의 자치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지도를 다시 그리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시대를 연상시킨다면서 “지정학적 판도라의 상자를 사실상 다시 열었

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랍 국가들의 맹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을 중동 지역 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길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 실현 가능성도 의문...하마스 “우리 땅서 추방하겠다는 것” 반발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동의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했고 그들이 이 구상을 매우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장 이슬람권을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주민의 강제이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수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떠한 미국의 중동 정책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변국의 반대는 더 심하다.

가자 주민이 이주할 국가로 거론된 요르단은 과거 중동전쟁 여파로 자국에 유입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왕가 축출과 국왕 암살 등을 시도해 내전을 치른 경험이 있다.

이집트 역시 경제 불안이 심각해 대규모 난민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무슬림 형제단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은 압델 파타 엘시시 현 이집트 대통령 입장에서 무슬림 형제단과 뿌리를 공유하는 하마스가 난민들에 섞여 유입되는 것도 우려할 지점이다.

이미 이집트·요르단·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주변 아랍권 5개국은 이달 1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주민 이주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제3국으로의 이주를 반기지도 의문이다.

가자 주민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제1차 중동전쟁 이후 75만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이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으로 전락했던 아픈 과거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 왔다. /연합뉴스

“딥시크, 안보 위협” 호주, 정부 시스템·장치에 전면 금지

“프로그램 발견 즉시 삭제해야”...이탈리아·대만 등도 금지령

호주 정부가 모든 정부 사용 시스템과 기기에서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사용을 금지했다.

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모든 호주 정부 시스템과 장치에서 딥시크 제품과 응용프로그램, 웹 서비스 사용과 설치를 금지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발견되는 즉시 삭제·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딥시크가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금지 조치는 호주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AI는 잠재력과 기회가 가득한 기술이지만 우리 기관은 국가 안보 위협

을 확인하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금지는 정부 기기들에 한정된 것으로 민간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호주는 이전부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각종 중국산 정보기술(IT) 사용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트럼프 정부 요청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면서 중국과 관계가 악화해 결국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

2023년에는 정부 청사에서 중국산 폐쇄회로(CC)TV와 영상 기록기 등을 철거했으며 정부 기에서 중국 바이트댄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틱톡을 금지한 바 있다.

딥시크에 대한 경계 움직임은 호주만의 모습은 아니다. 최근 딥시크가 빠르게 부상하자 각국은 딥시크를 통해 중국이 각종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우려하며 각종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기관 가란테(Garante)는 개인 정보 사용의 불투명성을 들어 지난달 29일부터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으며 대만도 각 부처·기관에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다.

미국 텍사스도 주정부 기기에서 딥시크와 중국판 인스타그램 사오후싱(영문명 레드노트-Rednote), 틱톡과 자매앱 레몬8 등을 금지했다.

이 외에도 일본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딥시크 사용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태국, 中 연결 고속철 2단계 승인

15조원 투입 2030년 완공 목표

태국이 라오스를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카오슛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약 3400억(14조6600억)이 투입되는 태국-라오스 고속철도 2단계 357km 구간 공사를 전날 승인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북동부 나콘라차시마에 이르는 1단계 250km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2단계는 나콘라차시마부터 라오스 접경 도시인 북부 농카이까지 이어진다.

현재 1단계 구간 건설은 약 36% 완료됐다. 애초 1단계는 2026년 완공 목표였지만, 자금 조달을 둘러싼 중국 측과의 분쟁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됐다. /연합뉴스

2단계 공사 기간은 사업 계획상 2032년까지지만, 태국 교통부는 최근 2030년까지 끝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단계 공사를 마치면 방콕부터 중국 윈난성 쿤밍까지 고속철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쿤밍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까지 1035km를 평균 시속 160km로 운행하는 중국-라오스 간 철도는 2021년 12월 개통했다.

태국은 중국, 라오스와 철도망 연결 사업에 관한 협정을 2019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의 하나로도 꼽힌다.

중국은 태국을 지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연결하는 범아시아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